

보도설명자료 (15.7.1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예산정책처 “정부 추경사업 4건 중 1건이
부실” (15.7.12. 머니투데이 등)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된 세부사업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무더기 ‘문제’ 판정을 받음
- 연내 집행되기 어려운 경우, 사업계획이나 사전절차 등 사전준비가 미흡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산업부의 추경예산안은 메르스, 가뭄 여파로 직·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들로 편성되었음.
- 메르스로 인한 국내 수요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,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발굴
- ☐ (무역보험기금 출연) 1,000억원 추경 편성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1조 2,5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

*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6,250억원, 중장기 산업설비 수출거래지원 6,250억원

- 금번 추경으로 증액된 출연금은 추경 편성 직후, 기금 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전액 사업비로 편성하여 연내 집행 예정임
- * (사업비 지출계획 세부 변경내역)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500억원 증액, 중장기 산업설비 수출거래지원 500억원 증액 편성
- 아울러, 보증성 종목 추가지원으로 인해 기금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강화*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
- * 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인수심사위원회의 집중심사, ② 거액건(US\$1백만 초과) 수출계약 진위확인 의무화, 특별모니터링(US\$5백만 이상), 분식회계적발 시스템 도입, ③ 중장기프로젝트 전문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업 지속 관리 등
- ☐ (특별지원사업) 집행계획 조기수립,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년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임
- 편성단계부터 실수요가 명확하고, 집행의지가 충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였고,
- 추후, 국회 확정시, 전담기관 담당자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월별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임
- ☐ 산업부는 추경예산편성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데로 추경예산안의 차질없는 집행과 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임.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나성화 과장(044-203-4040)
양수영 사무관(044-203-4049)
원전산업정책과 상생협력팀 김창희 팀장(044-203-5325)
김종범 사무관(044-203-5301)